

##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3C (communication, contribution, cooperation)

서재교 CSR 팀장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

# 차례

---

요약	1
공공기관 지역시대 본격 도래	3
1.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갖는 의미	3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외 사례	6
기대에 가려진 세 가지 우려	7
1. 경제적 우려: 원도심 공동화	7
2. 사회적 우려: 이해관계자 간 동상이몽(同床異夢)	9
3. 환경적 우려: 토건방식의 개발이 야기한 환경오염	11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3C	13
1. 소통: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부터	13
2. 기여: 지역사회를 고려한 기여, 제도 손질 뒤따라야	16
3. 협력: 혁신도시 내 공유가치창출(CSV)	18
시사점: 단기성과 보단 ‘과정’ 과 ‘관계’ 에 주목	20
1. 단기성과 보단 과정과 관계에 주목	20
2. 키워드 간 관계에 주목: 소통을 통한 협력,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20
참고문헌	22

## 요약

---

- 지역시대 본격화 한 공공기관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모토를 내걸고 지난 2008년 2월 시작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이 어느새 공정률 70%에 육박(2015년 5월 31일 기준)
  -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2015년 5월 31일까지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4곳 가운데 107곳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늦어도 2016년 12월까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끝내겠다고 언급
  - 부산과 울산,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90%이상 이전을 완료한데 반해, 제주(25%), 강원(42%)은 상대적으로 진척 속도가 느림
- 당초 기대한 장밋빛 청사진과 달리 적잖은 갈등도 속속 드러나
  - 사업 시작 이전부터 경남(진주), 경북(김천), 충북(음성과 진천), 강원(원주) 등 중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심히 우려됐던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본격화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점증
  - 탈법 시비가 일고 있는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갈등 등 지역사회 내부 문제도 심화되고 있는 양상
  - 도심 주변 녹지를 개발해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접수되면서 도시 재생 방식을 버리고 토건 개발 방식을 택한 부작용 대두
  - 공공기관과 이전 대상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의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경제, 사회, 환경을 고루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
-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3C(소통communication, 기여contribution, 협력cooperation) 제안
  -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소통(communication)을 통한 중장기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며,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합
  - 현재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매년 30~40여 국내 공공기관이 작성 중이며, 최근에는 글로벌 주요 도시들도 지역주민, 기업, 관광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양질의 삶을 제공하기 위한 성과 체크 도구로 활용 중

- 같은 맥락에서 단기성과 중심 혁신도시 건설에서 탈피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혁신도시가 되는데 필요한 요인으로 기여와 협력 제안
- 지역사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방식의 기여(contribution)로는 일회성 그리고 보여주기식 사회공헌활동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내 경제·사회적 영향력이 고스란히 전해질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사회공헌활동 제안
- 지속가능한 협력(cooperation)을 위해 다양한 협력주체가 함께 상승작용 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 방안 고려 가능
- 결국, 혁신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단기성과에 매몰돼 간과했던 혁신도시의 중장기 비전을 되새겨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그 결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유효

# 공공기관 지역 시대 본격 도래

## 1.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갖는 의미

- 지난 2005년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3가지 특별법(「신행정수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 가운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18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근거해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공기관 154곳이 지방 이전 진행 중

### 1) 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사(略史)

-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은 1960년대 중반부터 건설부, 경제기획원, 청와대, 서울시 등 다양한 주체가 논의해왔으며, 처음으로 실행에 옮겨진 계획은 1973년에 경제기획원에서 작성한 ‘대도시 인구 분산책’으로 46개 정부소속·출연기관 및 정부투자·출자기관의 지방 이전 방안 제시

〈역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요약〉

시기	주체	정책	세부 내용
64.9	건설부	대도시 인구 집중 방지	- 관공서 지방이전(지방과 관련된 연구 및 실험시설, 농업관계 시설과 군사시설)
69.12	무임소장관실	대도시 인구 및 시설 조정	- 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 정부기관 및 정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70.4	건설부	수도권 과밀 억제	- 중앙관서, 국영기업의 지방분산 - 행정권한의 지방관서 이양
72~81	건설부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수도에 위치할 필요가 없는 국영기업체 본사의 지방연구지 분산
72.9	청와대	대도시 인구 분산	- 2차관서, 교육시험연구기관, 국영기업체, 군기관의 지방 이전
73.3	경제기획원	대도시 인구 분산	- 강북도심의 15개 국가기관을 수원 등 수도권으로, 20개 국영기업체를 울산 등 지방으로 이전
75.5	서울시	인구소산계획	- 공공기관·기업체의 한수이남 및 지방으로 분산
77.7	건설부	임시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 임시행정수도 건설
80.3	경제기획원	수도권 분산대책	- 5개 국책연구기관 및 국립지리원, 국사편찬위원회를 대전, 천안, 과천 등으로 이전
85.11	총무처	정부대전청사 건립계획	- 철도청, 조달청 등 10개 청 단위기관 대전 이전
92~01	건설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수도권 내 공공기관과 대학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분산
92~96	경제기획원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 수도권 내 입지 필요성이 적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가능성 검토

93~97	경제기획원	신경제5개년계획	- 추가이전계획을 마련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속 추진
97	건설교통부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 특정 업무분야, 지방과 관련이 많은 기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과 관련이 있는 공공단체의 지방 이전을 유도 - 청 단위 기관의 대전 둔산 지역으로의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 부속기관도 이전을 검토

출처: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국제비교(김태환 외, 2007)

- 2000년대 이후엔 기재부가 중심이 돼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6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 및 발표해 사실상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한 토대 구축 완료**

<참여 정부 이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 연혁>

시기	내용
04.4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법적근거 마련
05.6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수립 및 발표
05.12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완료(시도별 입지선정위원회)
07.1	혁신도시특별법 제정(2.12시행)
07.9~	혁신도시별 부지조성공사 착수
07~12	이전 대상 공공기관 계획 승인

출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누리집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 **전국 10개 혁신도시 이전 대상 공공기관 115곳과 세종특별시 및 기타 지방 도시 이전 공공기관 39곳을 합한 154개 공공기관 가운데, 2015년 5월 31일 현재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은 모두 107곳**
-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92%), 울산(78%)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은 상대적으로 빠른 반면, 제주(25%), 강원(42%)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이전은 미진한 편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현황>

지역	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타
이전 대상	13	11	16	9	11	12	12	12	11	8	20	19
이전 완료	12	8	13	7	5	6	9	8	7	2	16	14

출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누리집

- 세종시를 제외한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가장 큰 면적과 사업비가 투입될 지역은 전북 전주와 완주 일대에 들어설 전북 혁신도시이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가장 규모가 작은 것으로 파악
- 대구 혁신도시 건설 면적은 전북, 광주·전남은 물론 충북 보다 작지만 사업비면에선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단위 면적 당 사업비가 가장 큰 곳은 원도심 인근에 혁신도시를 건설한 부산과 울산
- 이전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였지만, 단위 면적 당 이전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부산과 강원 순

<지방 10개 혁신도시 현황>

지역	위치	면적(천㎡)	인구(천명)	사업비(억 원)	이전 인원
합계		44,932	272	97,601	39,707
부산	영도·남구·해운대	935	7	4,136	3,274
대구	동구	4,216	22	14,369	3,366
광주·전남	나주	7,334	50	13,222	6,763
울산	중구	2,984	20	10,438	3,071
강원	원주	3,596	31	8,843	5,843
충북	진천·음성	6,990	42	9,890	3,045
전북	전주·완주	9,852	29	15,297	4,927
경북	김천	3,812	27	8,774	5,067
경남	진주	4,078	38	9,711	3,580
제주	서귀포	1,135	5	2,921	771

출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누리집

- 이전 대상 공공기관 두 곳 가운데, 한 곳은 200인 이하 영세 공공기관이며, 200인 초과 사업장 비중이 높은 혁신도시는 충북, 전북 혁신도시 순

<지방 10개 혁신도시별 공공기관 규모 현황>

지역 공공기관 규모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기타
	200명 초과	7	6	9	6	5	9	9	4	7	1	8
200~50명 이상	6	3	6	2	7	2	2	6	3	5	9	8
50미만	0	2	1	1	0	0	1	2	1	2	3	1

출처: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누리집

## 2. 공공기관 지방 이전 해외 사례

### 1) 해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례 분류

- 해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사업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 가능. 공공기관을 지방의 한 지역에 집중시키는 집중 이전 방식, 공공기관을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분산 이전 방식, 그리고 양자를 혼합한 집중과 분산 병행 이전하는 3가지 방식(강병주, 2006)
- 우리나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방식과 부합하는 방식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이 택한 분산과 집중을 겸한 방식
- 세종시와 기타 지역 혁신도시로 공공기관을 이전시키는 방식과 유사
- 이외에도,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계획한 일본의 사례 역시 주목할 만한 사례

〈해외 주요 혁신도시 사례〉

구분		계기 및 목적	추진 과정
집중 이전	브라질	국토 내륙부의 개발 촉진	1955년 신수도건설이 시작되어 1970년까지 주요 부처 이전 완료
	호주	국가 독립을 기념하여 국가로서의 일체성 강화	1908년 법률 통과 후 1980년대에 정부부처 이전 완료
	일본	수도권 과밀 억제	1988년 기본 방침 수립 후, 2002년까지 59개 국가기관 이전
분산 이전	독일	통일국가 상징성 선포	1990년 통일 조약시부터 시작하여 정부부처의 일부는 신수도로 이전하고 일부는 구수도에 잔류
	말레이시아	산재된 공공기관 한 곳에 집중시켜 업무 능률 향상	1990년대 초반 이전 대상지 선정 후 이전 진행 중
분산/ 집중 병행 이전	영국	수도권 과밀 집중 해소	1962년 시작해 1980년대까지 16개 기관, 40,900여명 런던 바깥지역으로 이전
	프랑스	파리와 기타 지역 간 불균형 해소	1990년까지 약 25,000명을 이전했고, 2003년까지 7차에 걸쳐 약 270개 기관(34,000명)을 8개 지역중심도시와 낙후지역에 분산
	스웨덴	스톡홀름 과밀 해소 및 국토균형발전 도모	1969년 이전 결정 후, 1988년까지 7,300명의 공공기관 직원을 16개 도시로 분산

출처: 외국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강병주, 2006)



# 기대에 가려진 세 가지 우려

## 1. 경제적 우려: 원도심 공동화

### 1) 중소 혁신도시 내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이전 대상 지자체가 내심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는 오히려 원도심 공동화로 인한 상권 쇠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급변
- 특히,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경북(김천), 광주·전남(나주), 경남(진주) 등 중소 혁신도시 내 원도심 공동화가 보다 심각
- 중소 혁신도시들의 지난 3년간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일부 시군에서 1% 정도 상승한 결과를 보여줬지만 경북 혁신도시가 들어 설 김천시의 경우 오히려 감소
-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면서 늘어난 임직원을 감안하면 혁신도시로의 새로운 인구 유입은 극히 적거나 오히려 기존 인구가 빠져 나간 것으로 파악
- 신규 인구 유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되는 신도시는 기존 원도심 공동화를 야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
- 특히, 혁신도시가 들어설 원주와 진주를 제외한 음성·진천, 김천, 나주시의 경우,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원도심의 5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상황. 광주·전남 혁신도시의 경우 일부 광주광역시 유입 인구를 고려하더라도 나주시 원도심의 공동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중소 혁신도시 인구 추이>

	인구 추이			혁신도시	
	2012	2013	2014	수용 가능 인구	원도심 대비 비중
원주	323,885	324,837	327,292	31,000	9.5%
음성·진천 (합계)	156,438	158,111	160,498	42,000	26.2%
김천	135,504	135,259	135,456	27,000	19.9%
나주시	88,067	87,754	90,669	50,000	55.1%
진주	337,314	337,071	340,241	38,000	11.2%

출처: 통계청 및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누리집

- 중소 혁신도시 가운데 원도심 공동화가 본격화된 곳은 진주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5년 공시지가 결과가 대표적인 예. 전남 나주와 경북 김천, 경남 진주 등 혁신도시 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8% 이상 상승했지만 진주시 원도심 지역인 대안동과 동성동, 중안동의 공시지가는 각각 2.28%, 1.37%, 1.08% 하락해 상반되는 결과를 보여줬음(경남도민일보 발표)

2) 천편일률적인 신도시형 개발이 원인

-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본격화하기 전, 2004년 BEXCO혁신도시 심포지움 발표에서 ‘세계의 혁신도시와 정책과제’ 를 발제한 중부대학교 강현수 교수는 혁신도시의 규모에 따라 개발 방식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
- ‘소규모 혁신도시’ 의 경우 재개발 방식으로 개발되어 도심 인근에 입지할 수 있으며, ‘중규모 혁신도시’ 의 경우 신시가지 방식으로 개발되어 도시내부 또는 외곽의 녹지, 나대지 등에 입지할 수 있고 대규모 혁신도시는 신도시형(New Town)으로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된다고 설명
- 국내 혁신도시의 경우 원도심의 규모와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부산을 제외하면) 모두 대규모 혁신도시를 지향하며, 신도시형 혁신도시 개발 강행한 탓
- 기존 도시와 공간적으로 분리된 신도시형 혁신도시는 적은 인구, 넓은 원도심을 가진 중소 혁신도시 입장에서선 원도심 공동화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

<도시개발 주체와 방식에 따른 해외 혁신도시 분류>

구분		도시개발 주체		
		공공 주도	공공과 기업이 공동 주도	기업 주도
도시 개발 방식	독립 신도시형	프랑스 소피아 앙티폴리스	-	-
	기존도시 인근 신도시형	프랑스 테크노 폴메즈 2000 (메즈 인근)	스웨덴 시스타 (스톡홀름 인근)	-
	기존도시 활용형	영국 세필드	스웨덴 옉살라	일본 도요타 독일 헤어쾨겐 아우라호

출처: 세계혁신도시와 정책과제(강현수, 2004)

- 영국 세필드는 국내 혁신도시가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 공공기관 주도로 기존 도시심을 최대한 활용한 이른바 도심재생형 혁신도시이기 때문
- 중장기적 안목에서 혁신도시를 바라보고, 도시의 외형 개발보다는 도시 혁신에 필요한 콘텐츠 중심 개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세필드 혁신도시 사례>

세필드시는 영국 잉글랜드 사우스요크셔주에 위치, 면적 367km<sup>2</sup>에 인구는 51만명. 광역도시권 인구는 약 100만명으로 잉글랜드 4대 주요 도시권 가운데 하나. 과거 철강 중심 산업도시에서 1990년대에 들어 잉글랜드 최초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도시경제 재활성화 정책 전개. 세필드시의 성공요인으로는 시정부의 장기적 안목과 일관된 추진 의지와 함께 현실적인 육성 업종의 선정 및 집적화를 들 수 있음. 또한, 도시 내부공업지역의 재개발과 효율적인 활용, 지역대학의 역할 및 산학협동 체계의 구축, 시민 및 기업 참여를 통한 접근방식 등도 핵심 성공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2. 사회적 우려: 이해관계자 간 동상이몽(同床異夢)**

1) 반쪽짜리 혁신도시 우려

- 올해 3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에 근무하는 20,219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한 인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23.1%인 4,66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미혼자(5,052명)를 포함해 15,000여명이 가족과 떨어져 홀로 살기를 택했는데, 그나마 부산(28.5%)이나 대구(28.1%), 전북(27.3%)은 가족 동반 이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강원(11.5%), 경북(18.1%)은 10명 중 불과 1~2명만 가족과 함께 이전

<10개 혁신도시 가족 동반 이주 현황>

지역	전체 이주(명)	가정 전체 이주(명)	비율(%)
부산	2,010	572	28.5
대구	2,571	722	28.1
광주·전남	5,904	1234	20.9
울산	2,559	656	25.6
강원	937	108	11.5
충북	1,316	201	15.3
전북	2,039	557	27.3
경북	1,678	303	18.1
경남	988	242	24.5
제주	217	71	32.7

출처: 국토교통부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족 동반 이주를 장려하며, 아파트 특별 분양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지자체와 여전히 정주 여건이 미흡하다고 푸념하는 공공기관 간 갈등과 마찰도 본격화

## 2) 준비 안 된 지역인재 채용

-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로 이전 또는 이전 중인 1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총 840여명으로 전체 채용인원 7,776명과 견졌을 때, 10.8%를 차지. 2014년 888명(10.2%)에 비해 비중은 약간 높아졌고, 절대 고용인원은 48명 감소 결과

〈혁신도시별 2014년 지역 인재 채용 결과 및 2015년 계획〉

지역	조사기관 수	2014년 결과			2015년 계획		
		전체	지역	비중(%)	전체	지역	비중(%)
	109	8,693	888	10.2	7,776	840	10.8
부산	11	403	111	27.5	286	66	23.1
대구	9	492	44	8.9	428	47	11.0
광주·전남	13	1765	198	11.2	1881	217	11.5
울산	7	981	60	6.1	592	31	5.2
강원	11	1,406	103	7.3	1066	81	7.9
충북	10	267	32	12.0	195	37	19.0
전북	6	698	75	10.7	495	65	13.1
경북	8	1,183	113	9.6	1,720	133	7.7
경남	10	724	86	11.9	514	86	16.7
제주	3	58	5	8.6	22	3	13.6
충남	2	310	34	11.0	175	16	9.1
세종	19	406	27	6.7	402	59	14.7

출처: 국토교통부

- 이렇게 되자, 공공기관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를 35%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수용한 공공기관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용자 및 투자, 자금조달, 기술개발,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논란 대두
- 급기야, 2015년 3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 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에 이르렀음
- 하지만 공공기관의 반론도 만만치 않아, “채 1년도 되지 않아 지방이전 공공기관에게 지역인재 채용을 강요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고 호소
- 실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국남부발전은 “첫 공채 때 지역인재를 32% 뽑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5년 신규 인력 채용 시,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지원을 많이 한 탓”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
- 오히려, “회사 전체 직원 2,000여명 가운데 본사와 사업소를 통틀어 부산권 근무자는 25%인 500명이 안 된다”면서 “남부발전 소속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

### 3) 중장기적 안목이 결여된 속도전 여전

- 혁신도시는 매우 긴 안목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시각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해당 지자체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
- 중장기적 관점에서 혁신도시 생태계 조성 전반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공공기관 건물 준공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정작 인프라를 채우고 발전시킬 콘텐츠엔 소홀
-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투자 대비 실제 효용이 가시적이지 않은 자원으로 분류되는 지역 대학 유치와 인재 양성 계획엔 무관심
- 다양한 해외 혁신도시 사례를 비취봤을 때, 대학의 이전 및 설립이 빠져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에 핵심 성공사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와 영국의 셰필드, 스웨덴 옅살라 사례 등 산·학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 성공 요인
- 단기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몰입하지 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소 혁신도시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 필요

## 3. 환경적 우려: 토건방식의 개발이 야기한 환경 오염

### 1) 신도시형 난개발 방식 우려 심화

- 중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른바, 신도시형 혁신도시가 외곽 지역에 들어서면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물론, 환경훼손과 오염도 우려
- 기존 도심 재생 방식을 외면하고, 농지 또는 삼림지를 무리하게 개발한데 따른 결과
-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환경오염 사례만 5개 혁신도시이며, 이들 환경 문제 가운데는 건설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하천 탁류 외에도 상수도 오염과 용암동굴 훼손, 자연하천 생태계 파괴 등 회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수준의 환경훼손도 포함

<혁신도시별 주요 환경오염 및 훼손 실태>

	대기오염	수질 오염	폐기물	소음 및 기타
강원			건축폐기물, 토양 오염	
경남	비산 먼지	하천 탁류		공사 소음 방지 미흡
광주·전남		상수도 오염		축산 악취
제주				용암동굴 훼손
울산				태화강 지천(명정천·유곡천) 생태환경 훼손

출처: 강원 건축폐기물([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30534](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30534))

경남 비산 먼지([www.newsgn.com/sub\\_read.html?uid=90681](http://www.newsgn.com/sub_read.html?uid=90681))

전남 축산 악취([www.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uid=229905&mode=view&menu\\_id=56:65:73](http://www.ikbc.co.kr/jw_2ds/index.html?code=main_news_02&uid=229905&mode=view&menu_id=56:65:73))

제주 용암동굴 훼손([www.yonhapnews.co.kr/culture/2013/06/05/0906000000AKR20130605182300056.HTML](http://www.yonhapnews.co.kr/culture/2013/06/05/0906000000AKR20130605182300056.HTML))

울산 생태환경 훼손( [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938](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4938))

## 2) 이전 완료 후에도 계속될 우려

- 혁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자체 차원의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 이후 공공기관이 야기할 환경오염 및 훼손 문제도 우려되고 있음
- 지난 2014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당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최근 5년간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및 처분내역 결과(2009년~2013년)’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는 총 40건
- 이 수치는 MB정권 때였던 2009년 20건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2010년 10건과 견뎠을 때, 4배 이상 증가한 것
-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기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례 총 건수(환경부 제출)는 2013년도 40건, 2012년도 13건, 2011년도 26건, 2010년도 10건, 2009년도 20건 등 모두 109건

#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3C(소통 Communication, 기여 Contribution, 협력 Cooperation)

## 1. 소통: 지속가능한 혁신도시,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부터

- 앞서 살펴봤듯,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백여 년 가까이 진행되는 중장기 사업. 90년대 중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완성한 말레이시아는 이제 겨우 첫 삽을 뜬 상태고, 프랑스는 2000년대 초반까지 모두 7차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정도로 오랜 기간 심사숙고해 사업에 임했음
- 반면, 국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4년 관련법 제정 이후, 착공 약 10여년 만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 154개, 4만여 명이 넘는 인력을 이전 완료시키고, 거기에 더해 기획재정부와 혁신도시는 지역사회 안에 완전히 녹아들도록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요구하는 등 공공기관 압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
- 정주 여건이 채 마련되지 않은 중소 혁신도시에 원치 않는 분양 특혜를 빌미로 가족 동반 이주를 요구하고, 지역 인재풀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이전 후 곧장 지역 인력 채용을 강제하는 법적 제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 지역주민,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상호 소통 없이 토건 개발 방식을 통한 단기 성과주의에 집착. 혁신도시 내 경제·사회·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원인도 같은 맥락
- 지금이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마주 앉아 상호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는 ‘이해관계자 중심 행정’ 이 필요한 이유
-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과를 담아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라는 점에서 혁신도시에 입주할 공공기관과 지자체 모두에게 필수 아이템

### 1) 1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공공기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 조직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지속가능 발전은 2010년 ISO26000을 계기로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조직과 개인에게도 나름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 는 개념으로 확대·발전 중
- 지속가능성보고서는 조직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사회적 책임 성과를 담아내는 도구로 본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시작됐지만, 주주의 이익과 국민전체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목적과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공공기관 사이에서도 급속히 확산 중

- 지난 2005년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한 이래,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으로까지 빠르게 확산돼 연평균 30~40여 공공기관이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지난 2005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공공기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에 따르면, 2005년 3건에서 2012년 32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공기업의 경우, 절반 넘는 곳이 이미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나서고 있었음
- 다만,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타 공공기관의 참여는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의 분발이 필요한 상황

〈연도별 공공기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연도								
	05	06	07	08	09	10	11	12	13. 6
전체 합계	3	4	12	21	22	29	36	32	5
공기업 합계	3	4	10	14	14	18	17	15	2
시장형	1	3	6	10	6	10	9	8	1
준시장형	2	1	4	4	8	8	8	7	1
준정부기관 합계			1	5	5	11	16	16	3
기금관리형				1		2	3	4	1
위탁집행형			1	4	5	9	13	12	2
기타 공공기관			1	2	3		3	1	

출처: 국내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재구성

- 공공기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을 이전 혁신도시별로 살펴보면, 발행 업체 수와 합계 누적 건수 모두 광주·전남과 강원 순으로 많음
- 충북과 제주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전무

〈혁신도시별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지 역	발간 업체(발간 누적)	발간 업체 (누적)
부산	한국남부발전(3), 대한주택보증(1), 한국자산관리공사(1), 한국예탁결제원(3)	4(8)
대구	한국가스공사(6), 한국감정원(4), 한국산업단지공단(3), 한국정보화진흥원(1)	4(14)
광주·전남	한국전력공사(8),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2), 농수산물유통공사(4), 한국인터넷진흥원(2), 한국농어촌공사(3), 한국전력거래소(5), 한전KDN(1), 한전KPS(3)	8(28)
울산	한국동서발전(6), 한국석유공사(3), 한국산업인력공단(2), 에너지관리공단(1)	4(12)
강원	한국관광공사(4), 한국광물자원공사(4), 근로복지공단(2), 국립공원관리공단(2), 한국광해관리공단(1), 건강보험심사평가원(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	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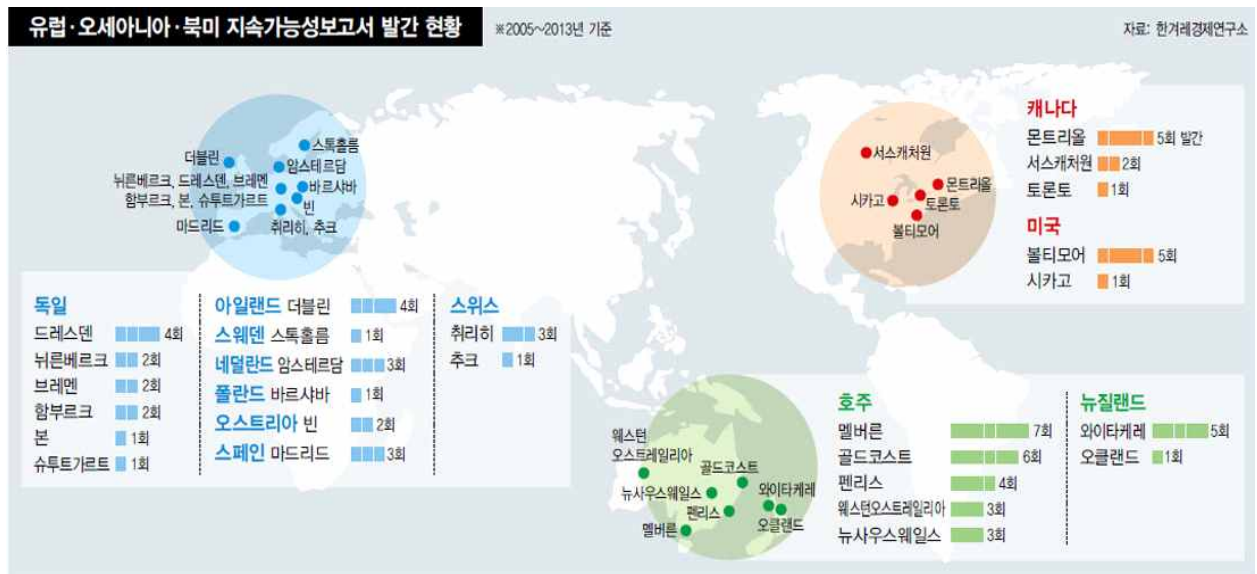
충북		0(0)
전북	국민연금공단(1), 대한지적공사(3),	2(4)
경북	교통안전공단(2), 한국전력기술(2)	2(4)
경남	한국남동발전(4), 한국토지주택공사(6), 중소기업진흥공단(1), 국방기술품질원(1)	4(12)
제주		0(0)
기타 지역	한국서부발전(4), 한국중부발전(3), 한국수력원자력(5)	3(12)

출처: 국내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현황 및 분석(한국기업지배구조원, 2013) 재구성

## 2)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에 혁신도시도 예외일 순 없어

- 개별 도시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시작으로 글로벌 주요 도시들의 발간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글로벌 주요 도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



- 도시의 지속가능성보고서는 도시가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따라 고용과 기업 유치 등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고, 그 성과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목적
- 다양한 공공기관이 이전 할 혁신도시의 경우 이전에 없던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자가 생겼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 도시 단위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이 활발한 해외 사례와 견줘 국내에선 2011년 서울 강동구가 지자체로는 첫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고, 인천 부평구는 자체 지표를 개발해 도시의 사회적 책임성과를 보고 중

- 혁신도시 가운데선 2013년 전주시가 경제, 사회복지, 교육, 생태와 환경, 자원과 에너지, 문화 등 7개 분야 30개 지표를 개발해 사회 책임 성과를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공유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에선 2013년 충청남도과 인천이 나란히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처음 발간했는데, 경제, 환경, 사회 영역의 기본적인 사회책임경영 평가 체계는 따르되, 교육과 재정, 행정서비스 등 정부 고유의 제도와 지역의 당면 과제를 반영한 게 특징임
- 예컨대 충남의 경우 지역 내 농업 비중이 큰 것을 고려해 관련 지표를 추가했고, 인천은 공항과 항만 등이 지역 경제, 사회,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보고서에 담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원도심 공동화, 환경오염 및 훼손 등 상대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사회 문제가 많은 중소 혁신도시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2. 기여: 지역사회를 고려한 기여, 제도 손질 뒤따라야

### 1)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기여

- 2014년 12월 닐슨코리아가 진행한 700여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조사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공기업의 절반이 넘는 68.6%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
- ‘사회복지’ 분야의 활동이 85.1%로 가장 많았고, ‘농어촌지원’ (55.8%), ‘환경보호’ (40.2%), ‘문화/예술/스포츠’ (4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이렇듯 많은 공공기관/공기업들이 민간기업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 중
- 많은 공공기관/공기업에서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만들어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들의 절반 이상(52.1%)은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특별한 파트너 없이 단독으로 수행해 지역사회에 끼치는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 가능
- 공공기관 단독으로 일회성 이벤트 형태로 이뤄지는 사회공헌활동 방식에서 탈피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제 및 사회적으로 파급력을 끼칠 수 있는 방안 도입 시급
-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들의 제품을 구매하는 이른바, 사회적책임조달이 대표적인 예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근거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 제2항

동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 하지만, 현 제도의 경우 구매계획만 밝히도록 의무화할 뿐 구매실적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어 시행 성과는 여전히 미미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 지원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포함 약 100여 곳 이상의 지방정부도 2009년부터 자체 조례를 통과시킨 상태지만, 관련 상위법이 없어 단체장 의지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실정
- 청사 청소(서울 서대문구), 도서관(경기 시흥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입찰을 진행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법으론 역부족
- 마찬가지로, 강원, 전북, 경남, 경북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우선구매 관련 양해각서가 속속 추진되고 있지만 제도 손질 없이 실행 효과는 미지수

## 2) 결국, 제도 손질이 선행 과제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후 혁신도시가 속한 지자체의 기대는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축소
- 박근혜 정부 이후, 설계된 공공기관 평가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상 불리한 평가를 받도록 기준 설정
-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살펴보면, 공공기관은 부가가치가 감소할 경우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해당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사회공헌활동 전담인력이 증가하거나 관련 기부금이 늘어나면 영업외비용이 증가해 해당평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 참여한 노사문제로 복리후생비를 줄이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경우, 보다 쉬운 사회공헌활동 예산부터 줄여 ‘방만 경영’이라는 꼬리표 떼기에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
- 실제 지난 2014년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에 따르면,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연 995만원이었던 강원랜드는 임단협에서 감축 합의를 보지 못하자, 장학사업과 노인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공헌예산을 전년 대비 100억원(30.3%) 감소

- 마사회도 직원 1인당 연 1,311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비를 감축하기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자 애꿎은 사회공헌 예산만 30억원(15%) 감축시켜 170억원 배정
- 기획재정부가 전국 혁신도시를 들며,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늘리라고 말로만 주문 압박하기에 앞서 이런 제도 손질에 나서는 것이 보다 우선이라는 요구가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

### 3. 협력: 혁신도시 내 공유가치창출(CSV)

#### 1) 지속가능한 협력, 공유가치창출을 통해

- 혁신도시 내 들어설 다양한 기관 간 지속가능한 협력은 어느 일방의 지원과 도움으로 이뤄져선 곤란. 지역 중소기업, 대학 등 혁신도시 내 다양한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일어나 상호 상승 작용을 거뒀을 때,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
- 2011년 마이클 포터 교수가 주장해 현재 기업 일반에 급속히 확산 중인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은 기업의 가치 사슬 안에 지역 커뮤니티가 들어와 상호 윈윈(Win-Win)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 기존 협력이 단순히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사회공헌방식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다면, 공유가치창출은 협력을 통한 경제 및 사회적 수혜가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론
- 이런 맥락에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협력 방안도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과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성 농후
- 현재 혁신도시 내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협력 가운데, 대기업의 가치사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공유 가치창출 방식은 크게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음
- 이러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혁신도시 내 위치할 필요는 없고, 높은 임대료 때문에 혁신도시 내 진입이 어렵다면,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간 협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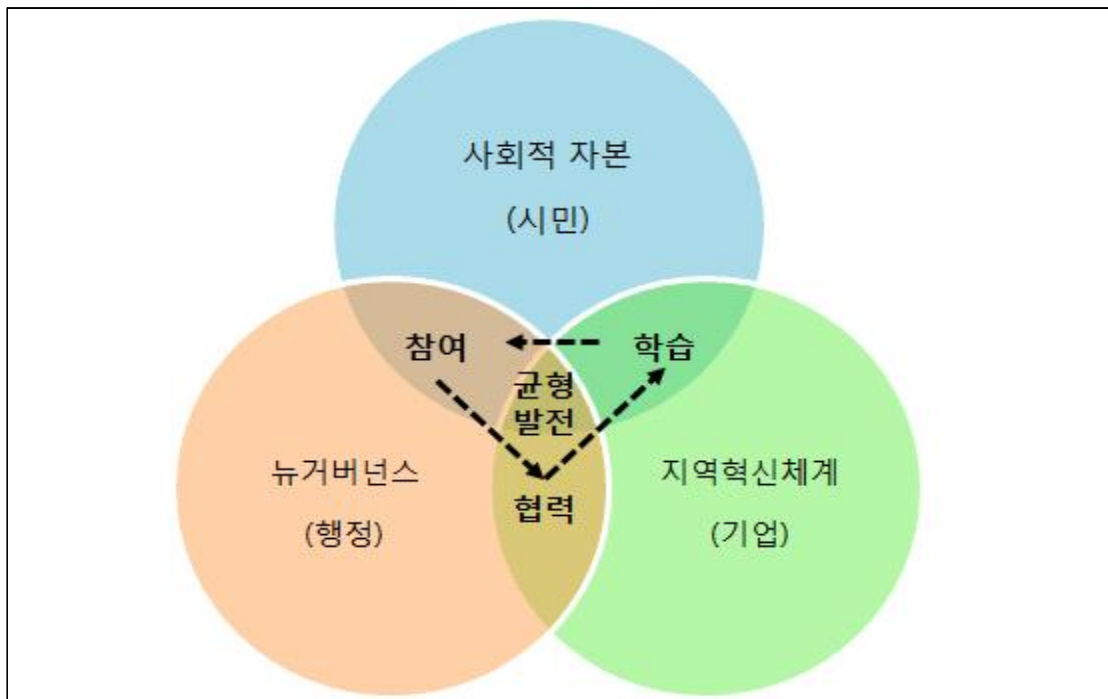
분야	사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	한전은 해외사업에 필요한 에너지 특화 전문 인재 육성과 지역 대학 육성에 619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하고 초진도분야 학과 개설 제안, 에너지 분야를 대학 특성화 분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동신대) 광주·전남 16개 이주 공공기관을 위해 경영대학원 등 특수대학원 분원을 나주 혁신도시에 설치하는 방안 검토(조선대) 한전과 공동연구나 기술개발, 관련 학과 신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전남대)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	세라믹연구소는 진주로 이전하면서, 경남지역 중소기업에 원천기술 제공을 통해 유리섬유 신제품 개발을 지원
	한국전력기술에서 필요로 하는 3D 캐드 부족 인력을 김천과학대와 협력하여 지역 인력을 교육·채용
	가스안전공사는 진천으로 이전하면서, 충청지역 중소기업의 가스안전 부품제조와 원격진단 기술 자문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반면, 공유가치창출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 초기엔 지역 공동체 발전을 이야기 하면서도 결국 수익사업에 치중해 기존 자본 중심 경제 개발 모델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그것
- ‘공유가치 창출 우수 사례로 매년 언급되는 네슬레는 코코아 생산 과정에서 아동 노동 문제에 대해 아직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 (2014년 10월 마틴 노이라이트 (Martin Neureiter),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교수 조선닷컴 인터뷰 )
-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 공동체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이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고루 고려한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출 모델의 든든한 토대
- 지방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구축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지역 공공기관과 협력하고, 이를 통해 창출한 공유가치를 학습해 다시 거버넌스에 피드백 하는 프로세스 수립 필요

〈균형발전을 위한 한국형 지방 거버넌스 모델〉



출처: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방안(행정자치부, 2007)

# 시사점: 단기 성과보단 ‘과정’ 과 ‘관계’ 에 주목

## 1. 단기성과 보단 과정에 주목

- 원도심 공동화가 빨리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신도시형 대형 혁신도시 건설을 강행한 이유, 몇 년째 아파트와 이전 공공기관 청사만 덩그러니 혁신도시를 지키고 있는 이유, 시골 농촌 마을이 갑작스레 환경오염과 훼손에 몸살을 앓고 있는 이유와 관련해 대표적인 공통 원인을 꼽으라면 중앙집권적 개발 방식을 통해 과정 보다 단기성과에 치중한 결과
- 공공기관 이전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인재 채용 20%를 강요하는 것과 매월 20만원의 지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할 테니, 황량한 혁신도시로 가족 전부를 이전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단기성과에 매몰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간과한 결과
- 지금 당장 지역인재 몇 %를 의무 채용하라는 요구보단 지속가능한 채용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내 인재 육성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이 보다 우선
- 마찬가지로 혁신도시 내 아파트 건설에만 열을 올리기보단 양질의 삶을 위해 필요한 교육, 문화, 예술, 의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입히는 작업과 균형을 이뤄가는 것이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족 동반 이주를 연결시키는 본질
- 프랑스와 영국 등 해외 혁신도시 이전 성공사례로 불리는 곳들 역시 단계별 이전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공통점이 있음. 이전 기관들의 불만과 어려움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적게는 5차에서 많게는 7차까지 점진적인 단계별 이전을 추진했음. 성과 보다 과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례
- 이를 위해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는 중장기 관점에서 혁신도시의 특성을 살린 미션과 비전을 수립해 지역주민, 이전 공공기관 직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나누는 것부터 시작
- 실현 가능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지역주민과 이전 대상 공공기관 직원에게 제안하고, 이를 위한 단계적인 실천 로드맵 수립에 나서는 것이 우선

## 2. 키워드 간 관계에 주목: 소통을 통한 협력,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가능케 할 세 가지 키워드, ‘소통’ 과 ‘협력’ 그리고 ‘기여’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협력하고, 협력의 결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
- 원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원주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소통

이 우선이고, 소통을 통해 합의된 거버넌스가 주도하는 다양한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또, 해결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 갈등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등을 통해 상호 소통하고,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을 서로 협력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또한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간 소통과 협력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가 선순환 관계를 가짐으로써 혁신도시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손질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소통을 통한 협력,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



## 참고문헌

---

- 강병주. 2006, 「외국의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한국자치발전연구원, 『한국자치행정연구』, pp 39~49.
- 강현수. 2004, 「세계의 혁신도시와 정책과제」, 부산 BEXCO혁신도시 심포지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4,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 추진현황」, 건설교통부 회의자료.
- 국토연구원. 2006, 「공공기관의 원활한 지방 이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방안 연구」, 건설교통부 연구용역보고서.
- 김태환 외. 2007, 「한국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계획과 국제비교」, 산업연구원, 『지역경제』, pp 64~94.
- 산업통상자원부. 2014,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한 지역 산업 육성 본격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14년 10월).
- 안상아. 2013, 「국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현황분석」, 한국기업지배구조원, 『CSR현황 II』, pp74~97.
- 서재교. 2014, “친환경·복지 등 ‘사회적 책임’ 성과와 소통에 주력,” 한겨레 신문(2014년 12월).
- 서재교, 2015, “최저가 낙찰제서 외형 위주 심사까지…여전한 문턱,” 한겨레신문(2015년 3월(2015년 3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2,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가이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 발간 자료.
- 한국정치학회. 2007,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지역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행정자치부 연구용역보고서.



---

## 더미래연구소 IF REPORT 2015-04

지속가능한 혁신도시를 위한 키워드, 3C(communication, contribution, cooperation)

발행일 2015. 09. 07

발행처 (재)더미래연구소(이사장: 최병모)

Copyright ©더미래연구소, 2015 ※본 자료는 더미래연구소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더미래연구소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미래' 를 만들어 가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 입니다.  
더미래연구소의 성장은 '후원회원' 의 힘과 꿈으로 가능합니다.

150-87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23, 902호(여의도동, 정원빌딩)

T: 02-785-2030, F: 02-786-2017, E: themirae2030@gmail.com

웹사이트: themirae.org

페이스북: www.facebook.com/themirae

블로그: blog.daum.net/themirae2030

---